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수 신 : 각 언론사 등
□ 배포일 : 2017년 10월 23일(월)
□ 문 의 : 박진 010-6268-0136 안진걸 010-2279-4251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이메일 : candle20161029@gmail.com

보도자료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 “촛불은 계속된다”

일시장소 :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1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광화문)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는 1차 촛불이 열린 2016년 10월 29일을 기념하며 국민들께 기록기념위원회의 활동보고와 함께 촛불1주년 사업을 발표했다.
2.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는 촛불 1주년 사업으로 10월28일 토요일 저녁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1주년 촛불집회 “촛불은 계속된다” 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진행된 23회 촛불을 기록한 촛불백서발간사업, 광화문광장의 기념상징물 제작사업, 국내외 시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를 소개했다.
3. 100대 촛불개혁과제는 지난 2월 퇴진행동이 촛불시민의 열망을 정리해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 를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촛불대선 이후 현 정부와 국회에서 촛불시민의 요구를 수용해 100대과제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 1주년 촛불집회 “촛불은 계속된다” 는 국민의 힘으로 꺼져가던 민주주의를 되살린 1700만 역사적인 항쟁을 기념하고,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집회는 촛불항쟁의 기록을 담은 시민들의 인증샷 슬라이드와 시민자유발언, 촛불무대를 함께 만들었던 전인권 밴드, 이상은, 시민과함께하는뮤지컬배우들(시함뮤), 우리나라, 권진원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 416가족합창단, 민중가수들과 시민합창단 등의 뮤지션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5. 6개월 간 타오른 촛불은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며, 국민들은 이 소중한 승리의 경험과 기억을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퇴진행동은 5월 24일 해산 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거대한 촛불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기념위원회’ 를 구성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진행안
2. 퇴진행동 해산 이후 경과와 모금사용 내역 보고
3. 촛불개혁과제 100대 과제 진행상황 보고
4. 촛불1주년 사업 소개

[붙임1] 기자회견 진행안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 “촛불은 계속된다” >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1시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광화문)

주최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진행순서

사회 : 윤희숙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사무국장

- 인사말 : 최종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퇴진행동 해산 이후 경과와 모금사용 내역 보고 : 정강자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촛불개혁과제 100대 과제 진행상황 보고 : 박석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10.28(토) 촛불1주년 집회 소개 : 박병우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1주년 기획단장
- 촛불1주년 사업 소개 : 박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백서팀장

[붙임2]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재정현황보고

1. 수입

(단위 : 원)

순	내역	금액	비고
1	잔액	780,490,713	5월 10일 퇴진행동 잔액
2	수입	5,482,093	추석선전물 단체분담금 3,822,000 후원 외 1,303,574 이자수익 356,519
	수입총액	785,972,806	

2. 지출

(단위 : 원)

순	내역	금액	비고
1	백서제작	167,000,000	
2	미디어팀	93,500,000	촛불영상제작 및 상영회 진행
3	기념사업	40,000,000	
4	법률대응	9,600,660	소송비용 8,055,660 벌금지원 1,545,000
5	장소사용료	30,271,790	광화문광장 사용료 지원 등
6	운영비	7,677,020	사무실 운영
7	선전홍보	13,794,000	추석선전물 제작 및 배포(7만부)
8	적폐청산투쟁지원	76,520,980	6대 현안 투쟁 지원 (언론/사드/백남기) 투쟁 지원
9	학술토론회	2,612,430	
10	기타지출	12,448,780	퇴진행동 채무 정산 12,402,610 세금 46,170
	지출총액	453,425,660	

3. 잔액

332,547,146원

[붙임3] 촛불개혁과제 100대 과제 진행상황 보고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1.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개요.

1) 6대 긴급현안 과제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지난해 연말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면서,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6대 긴급현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퇴진투쟁 과정에서 정치권과 국회는 천만 촛불의 개혁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6대 긴급현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후과 정권교체이후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2) 100대 촛불 개혁과제 발표

- 퇴진행동은 2017년 2월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꽃길을 부탁해] 등으로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대 촛불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그 내용으로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 등이었다.

2.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

1) 긴급현안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표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퇴진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후신 적폐청산 공동행동은 국민의 염원이고, 촛불의 명령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확인해 왔다.
- 이번에 발표하는 점검표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이며, 해당 의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점검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표를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2) 점검표 작성 방식

- 6대 긴급현안과 100대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 △, × 로 진행상황 표기했다.
- 진척 안된 것은 (×),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 해결된 것 (○) 으로 표기했다.
- 그리고 별도로 개혁 과제가 입법과제인 경우는 입법과제 란에 (√) 로 표기하여 국회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 개혁 100대 과제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는지도 (○, △, ×)표기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경우 (○),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 포함되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없을 때 (△)로 표시했으며, 그 이유는 비고란에 표기했다.

3.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 결과

1) 6긴급현안 과제 점검표

-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사드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폐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혁 중단 요구,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개 긴급현안 중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고,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혁이 중단되었다.
- 하지만 사드한국배치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4기가 추가배치되었고,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은 추진에 있다.

2) 100대 개혁 과제 점검표

< 개혁 과제 100대 추진 여부 >

- 개혁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과제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구속과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2개 과제였다. 전체 개혁과제 중 해결과제는 2% 정도인 것이다.
- 개혁 100대 과제 중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에 해당하는 (△)의 경우 52개 과제였다. 전체 개혁과제 중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가 52%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혁 100대 과제 중 반영되지 않는 과제가 46개 과제에 이른다. 46%에 해당하는 개혁과제는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 100대 과제 중 국회 입법 과제 >

- 100대 개혁 과제중 국회 입법 또는 법안폐지로 해결될 과제가 69개 과제였다. 전체 개혁 과제중 국회에서 해결될 과제가 69%에 이른다고 하겠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여부 >

- 개혁 100대 과제중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는 33개 과제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하는 100대 개혁 과제중 문재인 정부에 의해 33% 정도는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 개혁 100대 과제중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미흡하게나마 포함된 과제는 25개 과제이다. 25% 인 것이다.
- 개혁 100대 과제중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 와 미흡하게나마 포함된 과제 합치면 58개 과제에 해당한다. 58% 인 것이다.

4.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만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근본적 개혁이었고,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전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렇게 촛불이 밝혀진지 1년이 다되었고, 정권이 교체된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해결된 과제는 단지 2%에 불과했다. 여

전히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한 과제가 52% 나타났다. 이것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노정이 이제야 시작되었고, 첫걸음을 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100대 과제 중 국회 입법 과제가 69%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야권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작년 연말이 그러했듯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을 계속되어야 한다.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10대 분야 100대 과제) 점검표

	세부 과제	추진 여부	입법과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비고
6대 긴급현안	① 세월호 진상규명	△	√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특별법 11월 본회의 상정 예정
	②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인정. 경찰 기소. 강 신명 기소 제외
	③ 사드 한국배치 중단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어기 고 9월 사드 4기 추가 배 치
	④ 국정교과서 폐기	○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혁 추진 중단	○	√		
	⑥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	√	○	

	세부 개혁 과제	추진 여부	입법과제	문재인 정부100대 과제	비고
재벌체제 개혁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	√	△	국정과제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	√	○	
	④ 법인세 인상	△	√	△	
	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		×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	△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	×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	△	√	○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	√	○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	×	
공안통치 기구 개혁	① [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	√	△	
	②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	△	√	△	
	③ [국정원 개혁]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	△	
	④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	△	
	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	√	○	
	⑥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	△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검토 중
	⑦ [검찰 개혁]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기결(2017. 2. 23)

	⑧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	○	
	⑨ [검찰 개혁]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	√	×	개헌과제
	⑩ [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	√	△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중
	⑪ [경찰 개혁]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	√	△	개헌과제
	⑫ [경찰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	√	○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중
	⑬ [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	√	×	입법 및 개헌과제
	⑭ [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	√	△	국회 이관 등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 (개헌과제)
	⑮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	√	×	
정치, 선거제도 개혁	① 18세 선거권 보장	△	√	○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	△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강화'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	○	개헌과제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	○	개헌과제
	⑥ 국민발안제 도입	△	√	○	개헌과제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	√	○	2020년까지 단계적 실현.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진척 없음
	②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	√	○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추진중 ⇒ 현장에서 문제 드러나고 있음. 사용사유제한 기간제법 개정 등 일자리로드맵에 포함.
	③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	√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 일자리로드맵에 포함.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 교섭권 보장방안 미흡. 관련 법 개정 논의 진척 없음.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	○	일자리로드맵에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진척 없음. 법 개정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해석 폐기 계획.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		○	청년할당제 확대 등 일자리로드맵에 포함.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	√	○	ILO협약비준 등 일자리로드맵에 포함되었지만, 실제 추진상황은 더딤.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음.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금지	X	√	○	뚜렷한 진척상황 없음. 의원입법 발의되었지만 국회논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⑧ 해고요건 강화	△	√	○	희망퇴직 규제 등 일자리로드맵에 포함.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	√	○	고용보험적용확대 등 일자리로드맵에 포함.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X	√		뚜렷한 진행상황과 계획 없음.
사회복지·공공성·생존권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	√	○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 -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우선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급)이고 부양의무자나 그 가족이 노인,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자)이면,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①추진여부:X ②입법과제:√ ③문제인정부100대과제:√
	②[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X	√	○	
	③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		○	
	④ 주거권 보장	△	√	○	
	⑤ 아동 권리보장	△	√	△	아동 관련 국정과제는 주

					로 보호 위주
⑥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	√	○	
⑦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	○	국정과제에 청년 구직촉진수당 등 일부 포함
⑧건강보험후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의료비인하	△		△ ‘문제인 케어’, 비급여 전면급여화, 하위 50% 재난적 의료비지원	계획 불투명
	어린이 무상의료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노인무상 의료				
⑨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X		△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진행상황 없음
	병원공공성			△ 응급의료체계,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진행상황 없음
⑩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영리병원금지	△	√		복지부 제주도 질의에 대해 “임기내 영리병원 계획 없음” 답신
	규제완화				의료정보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 재논의 중
⑪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 개편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재인케어’ 통한 국가재정지원 강화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 없음 문재인케어 통한 국가재정지원 계획은 매우 미흡
	국가예산지원 강화				

⑫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의료인력 확보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간호간병서비스확충정부 계획은 급성기병상 1/3수준 국공립병원 비정규직 전환은 개별노사협상으로 지지부진
	외주화 중단			△ 비정규직 감축	
⑬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			쌀값 보장 대책은 일부 진전됨
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			농식품부와 협의 중
⑮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	√		한미FTA 개정협상 선언으로 약화
⑯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			
⑰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			
⑱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		'순환식 개발'이란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에 살았던 사람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수용단지'를 건설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나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보상을 수습하며 기타 명도소송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폭력철거가 진행되고 있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	X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행정조치 -최저임금 1만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②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X	√	X	-모자보건법 전부개정 -형법 269조, 270조(낙태죄)폐지
	③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 탈피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④ 성소수자 차별 해소	X	√		-가족구성권 보장 입법 -지자체 인권조례 개악 시도 저지 및 성소수자 기

				본권 보장 등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에 따른 긴급한 이행 필요	
	⑤ 차별금지법 제정	X	√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개혁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 원	X	√	○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 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X		○	정부차원의 인도지원의 경우 국민적 합의 전제로 한다는 입장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		○	남북공동선언 이행입장 여러차례 천명 / 실질 이 행은 미진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 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X			사드 배치, 킬체인 KAMD 등 3축체계 조기 구축 방침. 즉 MD 체계 강화 방침, 한일군사협정 유지 방침 /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 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X		△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한일위안부합의 경과 검 토 중. 그러나 한일군사협 력 강화 추세로 인해 화 해치유재단준치 등 한일 위안부합의도 그대로 두 려는 기류 강함.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X	√		방위조약, SOFA 등 불평 등한 근본적 구조 해결은 언급이 없고, 연합방위태 세 강화 및 한·미 간 현 안 합리적 해결 강조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X		△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평화협정 관련 유인 정 책, 입장 취약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 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X	√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X		△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	사드,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공개 미흡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 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	√	△ 국방 문민화, 인권 증진	군사력 증강, 국방비 증 액 예고 국방 문민화, 인권 증진

				입장 명확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X			
위험사회 구조개혁: 안전과 환경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	√	○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다만 원전 축소 계획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X	√	○	4대강 정밀조사·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국정과제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	√		정부 대책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개선을 발표. 의원입법 발의. 심의 안됨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		- 도급금지 및 원청 책임 강화 대책 발표. 범위가 좁음. - 산안법 개정은 의원입법 발의 있으나 심의되지 않음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	√		- 노동부 산재사망 형사 처벌 하한선 도입 발표 - 시민재해 관련 대책 발표는 없음. - 국회 의원입법 발의 되었으나, 심의되지 않음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X	√		- 규제프리존법 역행하고 있음.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 폐기 추진 없음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X	√		- 가슴기 피해자 모임 의견 반영 필요. 그 외 피해자 구제권리와 관련하여는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 되는 것들이 약간 있음.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X	X		- 대책 발표 없음 - 의원입법 발의 되었으나 심의 되지 않음
교육불평등 개혁·교육공 공성 강화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 차별금지) · 학벌폐지(학교평준화)	△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 학벌철폐는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음. 추가적인 구체적 실현 계획 미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 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X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 추진되지 않고 있음.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X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논의 없음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X			국공립대 지역 거점대학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지방대학발전 지원의 차원이며, 입시폐지·대학 평준화 실현에 대한 언급은 없음.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X	√		부패비리사학 척결, 공영형사립대학 정책 청사진 등 구체적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사립학교법개정계획이 없음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X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 경로나 계획이 미비.
	⑧ 교수·교사확보를 정기적으로 100% 확보 의무화	X			교원증원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X	√		주체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인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언론개혁과 자유권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	√	○	개정안 내용에 대한 재논의 요구 중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	√		집회시위 대응 변화는 있지만 집시법 개정까지는 못 감.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X	√	○	국회 입법 사항
	④ 국가보안법 폐지	X	√		법률안 제기도 안 되어 있음.
	⑤ 테러방지법 폐지	X	√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	○	
	⑦ 양심수 전원 석방	X			

[붙임4]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1주년 기념사업

1. 촛불 1주년 대회

1) 취지

- 국민의 힘으로, 촛불로 꺼져가던 민주주의 되살린 1700만 역사적인 항쟁을 기념한다.
-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를 확인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구속시킨 것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재벌의 상징 이 재용을 구속시킨 것도 촛불이었듯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도 다시 촛불을 밝혀 나가야 함을 확인한다.
-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다시 만날 것을 호소

2) 1주년 행사 기획안 '촛불은 계속된다.'

- 일시 : 2017년 10월 28일(토) 저녁 6시~8시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 촛불 사회자로 알려진 박진, 김덕진, 윤희숙의 공동사회로 진행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5인의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
- 기간 촛불항쟁의 기록을 담은 영상 및 시민자유발언, 촛불이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적폐 청산의 과제를 담은 영상과 의제 발언들과
- 촛불무대를 함께 만들었던 전인권 밴드, 이상은, 시민과함께하는뮤지컬배우들 (시함뮤), 우리나라, 권진원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 416가족합창단, 민중가수들과 시민합창단 등의 뮤지션들이 함께 함
- 촛불집회의 상징이기도 했던 소등퍼포먼스
- 행진(청와대와 시내 방향)으로 1주년 대회를 마무리 함

* 1주년 대회 SNS이벤트로 지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증샷을 모아 집회전에 상영할 예정입니다. 참가방법은 10월 28일까지 각자의 SNS에 “#1028다시광화문으로” 태그를 달고 촛불집회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3) 사전행사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오후 3시 북측광장 본무대
- 주최 : 민주노총

촛불1주년, 청년학생 공동행동. <촛불은 계속된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행동>

- 오후 3시. 동아일보사 앞
- 주최 : 촛불1주년 청년학생 공동행동 추진위(문의: 한국청년연대)

촛불1주년 인권 쉼기대회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 오후 4시. 장소 : 보신각
- 주최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공권력감시대응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미몬스터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고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제5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 10.27(금) 오후 2시(여의도 중소기업회관)~ 10.28(토) 오후 3시(보신각)
- 주최 및 주관 :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 지원단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촉구 대회

- 10.28(토). 보신각 앞
- 10시 : 자유발언 및 발달장애인당사자 공연
- 11시 30분 : 거리행진(보신각 -> 청계광장 -> 광화문역 -> 보신각)
- 12시 30분 : 폐회식 (폐회선언, 차기 대회 지역 안내)

“11/11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사전홍보 캠페인

- 오후 4-6시. 세종로 공원
-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고 11월 11일 오후 2시-8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될 “11/11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홍보.

전쟁위협 무기강매 통상압력 트럼프 방한반대 서울시국대회

- 오후 4시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대표 서울평화회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서울행동(준)

14차 KBS/MBC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문화제

-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인근

촛불혁명 1주년 버스킹 공연

- 오전 11시-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촛불문화연대

이명박 구속처벌 촉구 캠페인

-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주변
- 주최 : 노동당

“PRODUCE 공수처“

- 오후 2시~7시, 세종대왕상 근처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 오후 3시-5시 30분,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주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시민나팔부대 사전집회 및 행진

- 오후 4시 이순신동상 뒤 - 4시 30분~6시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행진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촛불항쟁 계승을 위한 대학생대회

-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앞. 주최 : 한대련, 민대협

취를 잡아 특공대

- 오후 1시. 사전행진 및 광화문광장

- 주최 : 시민의눈

*사전대회 및 부스는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2. 촛불영화 상영회

<촛불 지역상영회>

10.28 제주 상영회 / 10.28 광주 상영회 / 11.4 부산 <광장@사람들> 사전대회

<극장상영회>

일시: 10월 28일(토) .장소: 인디스페이스(관람료 무료)

- 1시 <광장>

- 3시 20분 <모든 날의 촛불>

<공동체 상영은 계속 됩니다!>

공동체 상영 신청하기.

- 우리 모두의 광장, 그 뜨거웠던 180일의 기록 <광장> 상영 신청하기! <광장> goo.gl/uSu9y4

- 당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 <모든 날의 촛불> 상영신청하기! goo.gl/eQtpKC

- 문의 : 시네마달 02-337-2135

3. 촛불백서 제작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진행된 촛불을 기록하는 작업.

올 연말까지 약 500페이지 두 권으로 제작하여 퇴진행동 참가단위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 전자책으로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

4. 각종 토론회

* 일정 확정 되면 별도 홍보 예정

1) 시민토론회 “촛불1년, 나는(우리는) 어떤 희망을 보았는가?”

- 일시 : 2017년 12월 9일(토) 장소 : 국회
- 주최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2) 학술토론회 “촛불시민혁명의 현대사적 의의와 한국사회의 과제”

- 일시 : 2018년 2월 예정
- 주최, 주관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교수학술4단체)

3) 국제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예정
- 해외 시민혁명 주인공들을 초대해,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토론함
- 주최, 주관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5. 촛불항쟁 상징물 설치

광화문광장에 각계각층이 참여한 촛불항쟁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하기로 하여 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인 3월 10일을 기점으로 2018년 3월 10일 전에 제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